

[오피니언]

월/요/광/장

곽수종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이 한창이다. 내년 2월 말이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업적난 변화를 겪었다. 10년 전인 지난 1997년에는 사상 최유의 외화위기를 맞았다. 종산층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감내해야 했던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후 유증은 지금도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다시 10년을 거스르면 1987년이다. 20년이 지났으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박종철', '이한열'하면 '6·29선언'이 쉽게 떠오른 것이다. 거리에 물결처럼 넘친 민의는 민주화였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뒷걸음질을 한 것이다. 당시의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커졌던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자그마한 변수에도 화들짝 놀라고 있다.

최근의 대외 경제환경은 사면초가(四面楚歌)나 다름없다. 우선 미국 달러화의 약세다. 미국시간으로 오는 11일 미 연방

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0.25% 인하 확률이 60%, 0.5% 인하 확률이 40%다. 미국 금리인하는 곧 달러화 약세를 말한다. 아마 내년 1월부터는 달러당

다는 것이다.

곡물가격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당장 밀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얕아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대외 경제여건이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전부는 아니다. 단순히 경제성장을 4~5%대에서 6~7%로 올리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갑지 않다. 새 정부는 더 멀리, 더 높이 보고 응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시스템 구축이

진을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친미, 친중, 좌파, 우파 등 4색당파식으로 국론이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격돌할 때 한반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유보파적인 이상주의에 국민을 내몰아서도 안 된다. 정치권은 중국과 인도가 거세게 추격해오는 냉엄한 현실에서 최소한 사소한 정쟁민족은 자체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리더십을 보이면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기업이 열심히 땀을 흘려 글로벌경쟁에서 앞서 나가면 존경과 경의를 보여야 한다. 일방적 짚사립을 막는 게 아니다. 정부와 기업도 신뢰를 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에게 회답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사느니 못사느니' 끄투어 온 날이 많아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손을 맞잡으면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꿈은 소박하다. 소박한 꿈을 거장한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따위는 필요 없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가면 국민의 꿈은 창해(滄海)만리이나 무궁해질 것이다.

〈삼성경제연 수석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한율이 890대를 기록할 것 같다.

고유가도 걱정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주 모임에서 증산 이야기는 끼어들지 않았다. 이란의 혁개발로 미이란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동 원유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석유 감산 등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서브프리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내년 8, 9월 중 확대 재생산될 경우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가능성성이 현재로서는 낮

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은 임시방편의 솔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기발전전략 차원의 정책이다. 지속적으로 개발·발전되며 경제정책은 후임 정부가 반드시 승계해야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제의 성장, 고용, 교육 문제 등 시스템의 문제다. 조각조각인 누더기 정책을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10년 이상 지속될 국가전략과 비

시설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 확산 막아야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

한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원유가 전남 해안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1995년 여수 해안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의 악동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방제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름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은 물론 남해안에까지 피해가 확산돼 환경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기름띠가 덮치면 그 뒤에 방제작업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유출된 기름띠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남도와 지역 해양기관도 사태주체를 예의관찰해 오염이 전남 해안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흔한 부추진 수능 등급제 보완 서둘러라

등급에 통점자가 몰리면서 바로 아래 등급이 비는 현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등급 블랭크'를 피했다 해도 문제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수리·가형(자연계)의 2등급 비율은 10.08%로 기준치 7%를 크게 초과했다. 반면 3등급은 9.55%로 기준치 12%에 못 미쳤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등급제 자체에 대한 논란이다. 수능 총점이 높아도 영역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등급으로 환산하면서 더 유리해지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내신 및 수능 등급제를 골자로 한 현 대입제도가 복잡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대학은 수능 및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며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혼란을 가중시킨 등급제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無等鼓

흔히 '케말 파샤'로 알려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영웅이다.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붙여준 영광스런 칭호다.

그는 1923년 초대 대통령에 올라 종교 국가인 터키를 근대국가로 변모시켰다.

그의 진면목은 무엇보다 청렴성에서 드러난다. 그는 대통령 당선 뒤 전 재산을 기부했다. 지도자는 재산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였

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지도자들이나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이 국민적 존경을 받는 것도 바로 축재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는 계약자 유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아래 성장했다.

해결은 '인간의 자유의사' 외부에 표

현된 것이 소유권이다"고 말해, 재산권을 인간 의지의 발로로 규정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의 저녁식사는 정육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왔다"고 설�했다.

부를 향한 이기심을 읊습한 탐욕의 영역에서 자연스런 속성이란 양자로

끌어낸 것이다.

반론도 거셌다.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은 "재산은 도둑질의 산물"로,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의 착취물"로 규정지었다.

재산이란 이처럼 양면의 칼날이다.

엄청난 부를 이룬 미국 갑부들의 기부는 유명하다. 투자의 귀재와 위험부담은 지난해 전 재산 440억달러의 85%를 자선기금으로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액수면에서는 우리나라로 못지 않다. 삼성과 현대는 최근 8천억원과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

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기부에는 감동이 없다.

기업비리가 문제였을 때 여론을 몰리기 위한 '생색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 한 채를 제외한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타 후보측은 '매표행위'·'국민과의 뒷거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부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의 발현이길 바란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합의는 절저하게

윤춘주

기고

김화진

요즈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중의 하나가 성공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하지만 바로 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성공의 목표는 결국 돈, 부의 축적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대그룹의 간부가 위장전 입으로 땅 투기와 하마터면 범죄를 얻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문제는 그 위장전입을 문제삼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합의서와 동시에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어야 했던 것이다.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자문을 하게 된 회사는 투자회사와 계약

자가 양해왕의 초청을 받아 혜택을 만났다.

양해왕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와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何必利曰) 하고 전제한다.

또 맹자는 "萬에서 千을 받고 千에서 百을 받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참으로 義를 뒤로하고 利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爭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하고 이

의만을 주구하는 나라나 사람은 올바로

돈만을 목표로 하는 그릇된 성공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작금의 우리 국민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정살림이 어렵고 사회생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한탕해서든지 돈좀 크게 얻었으면 하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돈의 위력에 수많은 권력들이 길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식을 으뜸으로 하는

여야 할 의학도들 마지막 인기 있는 과, 소위 경제적 고부가치 창출이 되는 과에 입성하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한다고 한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크게 관심이 있다고 내가 아는 진학지도 선생님이 귀띔해 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한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합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있는지 작성한 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소송에 이르면 내 손해를 100% 배상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두는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법률전문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될 수 없는 이치를 말했다.

그리고 끝에서 "왕께서는 역시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터인데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거듭 강조하였다.

아흔 아홉을 가진 부자가 하나 밖에 없는 가난한자의 것을 탐내는 세상이다.

요즈음 경제, 경제 하다보니 인의가 회미해져서 도덕 불감증이 오고 도덕의 타락현상이 가속화 되어 각종 범죄로 물살을 끊고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던지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올바르지 못한 성공시대와 그 무리들을 동경하고 함께 하여야 되겠는가!

〈한국나눔운동연합회 광주시 지회장〉

12월 19일 재·보선도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자이며 보궐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일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정권교체일이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틀을 다진 도약의 10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각 당에서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하면서 유권자의 향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보자간 구도나 정책선거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실망감으로 투표율은 예년 대선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외형이 커졌음에도 정치발전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두고 급한 기질의 민족성 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인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제 불과 20년이다. 서양에서도 몇 백년간 진행된 정치발전과 비교해 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제도와 의식이 어느 정도

의 수준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로소 정치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선거과정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정치참여에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저자아도취에 빠진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치러지는 작은 재·보궐선거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대안과 정책을 가진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헌정의 씨운을 풀 수 있다.

▲ 김효경·나주시선관위 홍보기장

백화점서 산 신발 A/S 불성실…소비자들 '분통'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발 안쪽의 가죽이 벗겨지고 변색이 일어나 수리를 맡겼다.

얼마 뒤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벗겨진 부분에 단순히 덧칠 정도만 해놓아 점원에게 항의하였더니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직접 본사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본사에서는 신발 상태를 본 뒤에 말 할 수 있다며 신발을 다시 본사로 보내 줄 것을 요

구했고 한곳의 백화점을 지정하여 착불로 보내리 했다. 이후 본사에서는 다시 염색을 했으나 일단 수선된 신발을 보고 다시 불만 사항 등을 연락하자고 했는데 몇 일이 지나도 전화 한통 없이 무소식이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질적 믿음, 구입한